오늘의 주요기사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2면	“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 의정비 현실화 시급 ”	1
강원도민일보	27면	의장협의회 의장단 · 한창섭 행안부 차관 간담회	2
미디어타임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창섭 행정안...	3
江原日報	04면	강원대 내일 ‘ 개교 75주년 ’ 감사의 날 개최	4
江原日報	07면	강원중소기업 융합플라자	5
강원도민일보	03면	도 "2050억원 채무 완전 회수 불가능… 최대한 거둬들일 것...	6
江原日報	03면	GJC 보증채무 놓고 ‘ 전 · 현 도정 ’ 책임 공방	7
KBS 춘천		레고랜드 빚 상환 2,050억, 예결위 심의 시작	8
G1방송		도의회 예결위, 레고랜드.반값 농자재 등 관심	9
춘천MBC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가동.. 레고랜드 채무 상환 논쟁	10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도 GJC 경영진 교체 신호탄 산하기관 혁신 작업 속도	11
江原日報	21면	“ 종합 사회서비스 환경 구축 … 더 나은 복지 실현 노력 ”	12
江原日報	21면	[동정] 박대현 강원도의원(화천)	13
江原日報	21면	제4회 강원아카데미	13
G1방송		도의회-G1방송 주관 '제4회 강원아카데미' 개최	14
강원도민일보	01면	화물 총파업 레미콘 공장 · 건설현장 연쇄 셧다운	15
江原日報	01면	재고 바닥난 레미콘 공장 · 주유소 속출	16
江原日報	08면	尹 대통령, 오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17
강원도민일보	05면	업체 "기장 과실" vs 유족 "헬기 문제" 사고책임 놓고 대립	18
江原日報	02면	1년에 한 번꼴 사고 … 기령 47년 이상 4대	19
江原日報	05면	2~3초 만에 수직 추락 … 기체결함 가능성 등 조사	20
江原日報	05면	헬기 추락 현장 조사	20
강원도민일보	01면	"테슬라 공장 강원도에 유치하겠다" 김진태 지사 기가팩토...	21
江原日報	01면	테슬라 전기차공장 강원 유치 나선다	22
강원도민일보	24면	조별리그 마지막까지 부상 이탈 속출하는 '겨울 월드컵'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화물연대 파업, 조속히 정상화 해법 찾아야 한다	24
江原日報	19면	[사설] 인구소멸 현실화, 강원도 ‘ 지속 전략 ’ 다시 짜야	25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소양강댐 주변 지역 정당한 지원을 26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시멘트 폐기물세 신설 빨라야 한다 27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종합 02면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의정비 현실화 시급"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協 행안부차관 간담회서 제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권혁열(강원도의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28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현기(서울시의장) 협의회장과 강원도의장인 권혁열 사무총장, 허식(인천광역시의장) 부회장, 국주영은(전라북도의장) 부회장, 김기환(울산광역시의장) 부회장, 상병헌(세종특별자치시의장) 정책위원장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은 28일 서울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고, 이들은 '협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다.

권혁열 사무총장은 "지방자치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해 지방의회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19년째 동결된 지방의회 의정비 현실화를 강조했다. 이에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건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9일 (화)
인물 27면

의장협의회 의장단·한창섭 행안부 차관 간담회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등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이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제공=강원도의회

미디어타임즈

2022년 11월 28일 (월)
서울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

이옥수 기자

[미디어타임즈=이옥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28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기 회장을 비롯해 허식 부회장(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부회장(전라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상병헌 정책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김현기 회장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김현기 회장은 '협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자치입법권 확대 등이다.

김현기 회장은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지방의회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건의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기 회장은 지난 11월 23일에는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 현안 사항을 건의했으며, 11월 25일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사회 04면

강원대 내일 '개교 75주년' 감사의 날 개최

강원대는 30일 오후 3시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대학교 개교 75주년 감사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개교 75주년을 기념해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와 대학 구성원,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후원자 예우 강화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헌영 총장, 김영철 강원대 발전후원회장, 이필현 총동문회장, 김영도 재경동창회장, 한기호·허영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도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경제 07면

강원중소기업 융합플라자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회장:최호림)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부 등과 함께 다음달 1일 오후 3시 원주 빌라드아모르 4층에서 '2022년 제27차 정기총회 및 강원중소기업 융합플라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원 중소기업 회원간 상호 경영·기술 정보 교류 활동으로 인적 네트워크 확대와 결속력 강화를 통한 융합 교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융합플라자에서는 권혁열 도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유관 기관 관계자, 타 지역 연합회 초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회원에 대한 포상 및 감사패 수여식도 열린다.

※수상자 명단은 강원일보 홈페이지 (www.kwnews.co.kr) 참조.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9일 (화)
종합 03면

도 "2050억원 채무 완전 회수 불가능… 최대한 거둬들일 것"

도의회 예결특위 상환계획 점검
예결위원 회수 가능여부 의구심
내달 1일 도본청 예산안 조정의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상환 이후 계획 점검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강원도는 "2050억원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는 없다"면서 "중도 땅의 가치를 끌어올려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강정호)는 28일 31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산업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안' 2051억원을 심의했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일제히 보증 채무 회수가 가능한지 따져물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해 어떻게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 채무정산 후 중도개발공사 재산이 얼마 정도 확인이 되느냐"고 물었고, 김기하(동해) 의원도 "의회 승인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 통탄할 일"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채무 상환액을 확보할 건지 도민들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심오섭 의원 김기하 의원 김정수 의원

최재민 의원 류인출 의원 전찬성 의원

김정수(철원) 의원은 "지사가 유감 표명도 했고, 채권 확보도 80% 정도 된다고 했다. 앞으로 사업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했고, 최재민(원주·이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을 준수하고 사후 추인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과 윤인재 산업국장은 이날 중도 부지 매각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 실장은 "(계약이 된 중도 부지의) 중도금과 잔금이 있고, 아직 팔지 않은 땅이 있다. 다 더해도 2050억은 나오지 않는다. 2050억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 없다는 계산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면대교 건설이라든지 땅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더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판매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컨벤션센터 주차장 부지에 대해 멀린사와 조정을 해서 이 부지까지 매각을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인출(원주) 의원은 "매각대금을 팔아 회수를 하려고 했다면 중도개발공사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면 안됐다"며 "회생신청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전찬성(원주) 의원은 "(김 지사가)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워 추경을 없앤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자 부랴부랴 세우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며 김 지사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도본청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내달 1일 4차 회의에서 이뤄진다.

이설화 lofi@kado.net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호)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원도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서영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종합 03면

GJC 보증채무 놓고 '전·현 도정' 책임 공방

〈중도개발공사〉

도의회 예결특위서 여야 격돌

속보=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정호)가 28일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50억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 도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강원도 예산안 심사는 내달 1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를 반영해 관련 예산(본보 28일자 3면 보도)부터 집중적으로 살폈다. 채무를 대신 갚게 된 경위를 살피면서 전·현 도정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발언이 오갔다.

전찬성(더민주·원주) 의원은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신청 여부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49명의 도의원이 김진태 지사의 거수기냐"며 "부지매각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했었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연체이자 13억원이 생겼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책임자가 누군지 추궁했다.

이에 윤인재 산업국장은 "내년 1월29일 기한이 상실되는 시점에 연체이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중도개발공사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공격에 최재민(국민의힘·원주) 의원은 "도지사를 세 번씩이나 했던 최문순 전 지사는 '2,050억원을 세금으로 안 갚아도 됐었을 돈', '중도개발공사는 흑자기업'이라고 인터뷰했다. 기가 찰 노릇"이라며 "강원도가 고의부도를 냈다는 등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확실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한수 기조실장은 "2,050억원은 강원도가 갚았어야 할 돈이며 중도개발공사는 흑자기업이 절대 아니다"라고 답하며 최재민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또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준수' 등의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고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다른 여야 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도민의 세금 2,050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심오섭(국민의힘·강릉) 의원은 "강원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 이후 이를 전액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윤인재 산업국장은 "현재 토지매각 잔금, 미납한 공사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 시점에서 100%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류인출(더민주·원주) 의원도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채권을 정확히 확보한 이후에 배상금을 대신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한수 실장은 "강원도가 큰 금액을 보증 이행하면서 도 재정에 충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안다"며 "큰 금액이지만, 강원도 재정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해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 배분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까지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1일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절차인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강원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강정호)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신세희기자

野 "의회 동의 없이 회생신청 … 불필요한 연체이자 13억" 비판
與 "3선 지사가 '세금으로 안갚아도 됐을 돈' 발언 기가 찰 노릇"
'공사로부터 도민 혈세 2,050억 환수 방안 수립' 요구 이구동성

2022년 11월 28일 (월)
강원

KBS 춘천

레고랜드 빚 상환 2,050억, 예결위 심의 시작

[앵커]

레고랜드 관련 채무 2,050억을 갚기 위한 강원도의 예산안이 지난주에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오늘부터(28일) 시작됐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첫날.
레고랜드 빚 상환 예산 2,050억 원을 첫 심의 안건으로 골랐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빚을 강원도민들이 대신 갚게 된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장, 빚을 갚고 나면, 이 돈을 다시 회수할 방안이 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류인출/강원도의원 : "변상금을 변상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변상을 하시고, 채권 확보를 협의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윤인재/강원도 산업국장 : "일단 저희가 채무 보증 이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원도 소유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는 경영 정상화를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제시했습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새로운 대표이사를 저희가 선임을 하고 경영혁신을 통해서 그런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회생 신청 방침을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발표한 김진태 도지사에 대한 비판도 다시 나왔습니다.

[전찬성/강원도의원 : "도민을 대표해서 49명이 뽑혔고, 도민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도의원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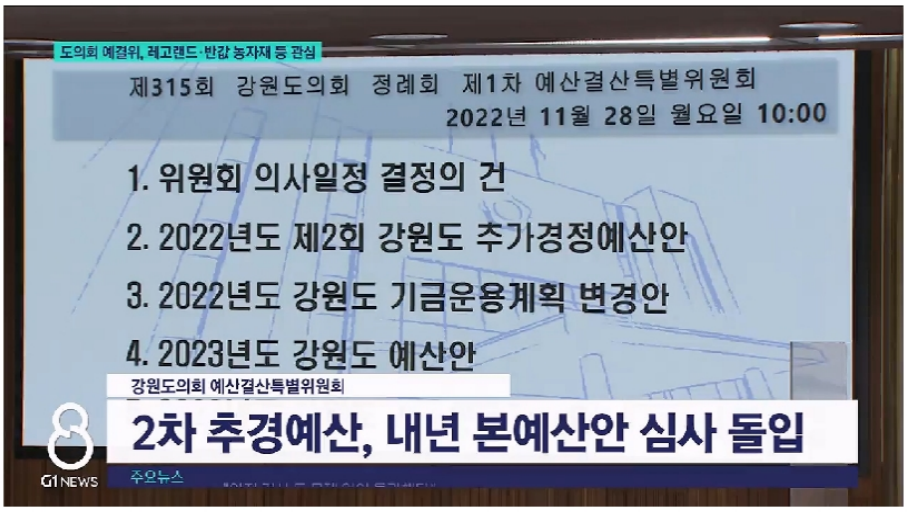
예결위는 2,050억 원의 승인 여부에 대해 다음 달 1일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채무 상환을 위한 추경 예산안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고순정

2022년 11월 28일 (월)
강원
G1방송

도의회 예결위, 레고랜드.반값 농자재 등 관심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앵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레고랜드 보증채무와 농자재 반값,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비 등이 관심 예산인데요.
일부 예산을 두고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예산안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1억 원.
김진태 지사와 같은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여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예결위에서도 예산의 타당성 논쟁 보다는, 하중도 개발사업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터뷰]
"채권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까에 대해서.."
2,051억 원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강원도는 이미 매각한 땅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확보하고,
팔지 않은 부지에 대해선 가치를 높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도개발공사 새 대표 선임 직후 경영혁신도 강조했는데,
회생신청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중도개발공사를 지금 현 상태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저희가 발표했던 대로 이 두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무늬만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의 경우, 상임위에서 증액된 30억 원이 예결위 문턱도 넘을 지가 관심입니다.
또 상임위에서 37억 원이 삭감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아동지킴이 사업' 예산은 부활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자치경찰위 예산은 경찰에서 공을 들인 사업입니다.

[인터뷰]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도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잘 감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위는 다음달 7일까지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춘천MBC

2022년 11월 28일 (월)
강원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가동.. 레고랜드 채무 상환 논쟁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까지

강원도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예결특위는

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 상환액

2,050억 원을 가장 먼저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긴축재정으로 추경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볼썽사납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채무를 상환한 뒤 회생 신청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는 자산을 다 매각해도

74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채무 보증을 이행하면,

자산이 모두 강원도 소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길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9일 (화)
종합 02면

강원도 GJC 경영진 교체 신호탄 산하기관 혁신 작업 속도

중도개발공사 민영화 추진
출자출연기관 축소도 검토
도립극단·도일자리재단 등
기능 중복 정리·활성화 의지

속보=송상익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대표이사가 최근 사임 의사(11월 24일 웹·25일자 12면 등)를 밝힌 가운데 강원도가 GJC 경영진 교체에 이어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도 산하 기관 혁신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내달 1일을 분기점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테크노파크의 경영진을 선정해 나가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테크노파크는 내달 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신임 기관장인 선을 위한 사안을 논의한다.

중도개발공사는 최근 송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이날 이사회에서 신임 원장 후보자 1명을 최종 선정한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난 17일 원장 추천위를 열고 원장 후보자를 2배수로 압축했다.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된다. 도는 26개 출자·출연기관을 22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

현재 검토안의 경우, 중도개발공사와 (주)강원수출이 정상화되면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강원도립극단을 강원도문화재단과 합병하는 안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을 강원도경제진흥원에 합병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확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검토안은 기능 중복 및 활성화를 위해 경제·문화분야 출연 기관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승환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인물 21면

"종합 사회서비스 환경 구축… 더 나은 복지 실현 노력"

2022 강원복지포럼 성료

'2022 강원복지포럼'이 28일 도여성가족연구원 1층 강당에서 '특별자치시대 강원, 사회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사)미래복지경영, 도사회서비스원, 도사회복지사협회, 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등이 후원한 이날 포럼은 2023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발맞춰 강원도의 복지서비스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영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미래복지 비전 탐색, 복지국가에서 돌봄국가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특별자치시대 강원, 사회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수정 국제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2022 강원복지포럼'이 28일 도여성가족연구원 1층 강당에서 '특별자치시대 강원, 사회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장은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되기 위해 종합적인 사회서비스 환경 구축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을 위한 사회복지가 촘촘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이경희 도 복지국장, 최성균 (사)미래복지경영 이사장, 변영혜 도사회복지사협회장, 홍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사회복지종사자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인물동정 21면

접경지 발전전략 포럼

◇박대현강원도의원(화천)은 29일 오후 2시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리는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인물 21면

제4회 강원아카데미 2022 제4회 강원아카데미가 2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김기하·김희철·이무철·임미선·최종수 도의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허인구 G1방송 사장,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메타버스 시대 바꿔야 할 3가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G1방송

2022년 11월 28일 (월)
강원

도의회-G1방송 주관 '제4회 강원아카데미' 개최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강원도의회와 G1방송이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연하는 아침포럼, '제4회 강원아카데미'가 오늘(2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메타버스 시대 바꿔야 할 3가지'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제5회 강원아카데미는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9일 (화)
종합 01면

화물 총파업 레미콘 공장·건설현장 연쇄 셧다운

시멘트 출하 사실상 중단 상태

레미콘 132곳 내일부터 생산불가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 작업만

속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등을요구하면서총파업에돌입(본지 11월28일 4면 등)한 지 닷새째 접어들면서 도내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이 본격화, 건설현장의레미콘타설중단도속출했다.

시멘트 출하가 지난 24일 파업 이후로 사실상 중단되자 도내 레미콘 공장들은 시멘트 보유량이 없어져 가동을 중단하는곳들이이어졌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따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재고량이 사실상 없어져 철원 6곳, 홍천 7곳의 공장이 28일 레미콘 생산을 멈췄다. 이날 춘천 7곳, 고성 8곳, 양양 7곳의 레미콘 공장도 시멘트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냈다.

29일부터 총파업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도내 최다 레미콘 생산 공장 밀집지역인 삼척과 강릉 등 영동지역 레미콘 공장의 시멘트 재고량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이 이어질 경우 오는 30일부터 조합원사 132곳의 레미콘 공장이 생산을 멈춘다.

홍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현장 두 곳 모두 레미콘 타설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골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주변 작업만 진행하고 있다"며 "영하권으로 날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열풍기를 트는 등 작업을 해서라도 레미콘 타설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주요 시멘트 제조사에서 BCT 차량을 이용한 출하가 일부 재개됐지만 사실상 미비한 수준으로 레미콘 공장과 건설현장의 '셧다운' 위기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명분 없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지원할 테니 시멘트 사들은 업무를 개시해달라"언급한 데 이어 국내 7개 시멘트 제조사는 3000여명의 BCT 기사 가운데 비조합원 1000여명의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BCT의 정상 배차를 주문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내 시멘트 제조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3대의 BCT 차량으로 출하가 진행됐다"며 "배차는 120대 가량 됐지만 기사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진입로 일대에 있기 때문에 운송에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물연대와 정부는 총파업 닷새만에 교섭에 들어갔으나 결국 결렬,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결국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대화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신재훈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종합 01면

재고 바닥난 레미콘 공장·주유소 속출

화물연대 파업 여파… 동해항 컨테이너 반출입 '0'

속보=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본보 지난 27일자 4면, 25일자 1면 보도) 여파가 강원도 내 레미콘 산업과 항만 주유소 등으로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8일까지 도내 레미콘공장(조합원사) 125곳 중 28곳(22.4%)이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멈췄다. 57곳(45.6%)은 29일이면 남은 재고가 모두 소진되고 나머지 40곳 역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이틀이 최대다.

동해항 컨테이너 반출입은 지난 27, 28일 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기록했다. 주유소들도 불안한 상황이다. 유조차 기사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기름 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사)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화물연대에 총파업을 즉각 중지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익기·김현아·류호준기자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종합 08면

尹 대통령, 오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직접 주재… 대통령실 "불법행위 엄정 대응"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긴급하게 언론 매체에 공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여건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 속에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제를 발목 잡고 국민 일자리를 망가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서울=이무헌기자 trustme@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9일 (화)
사회 05면

업체 "기장 과실" vs 유족 "헬기 문제" 사고책임 놓고 대립

양양 헬기 추락 5명 사망

업체대표, 비공식적 탑승 지적

유족측 "사고 전에도 기계결함"

제자리서 2~3바퀴 회전 장면 포착

여성 사망자 2명 경기거주 50대

속보=산불 계도 비행중이던 임차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본격화(본지 11월 28일자 1·5면)된 가운데 숨진 사망자의 유족과 임차 헬기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원인이 꼬리 회전날개의 고장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기장의 전적 책임" 업체 주장**

업체 측은 사고의 책임을 기장에게 돌리고 있다. 28일 임차 헬기업체인 트렌스헬리 이종섭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원 미상의 여성 2명은 승무원 중 1명의 지인이다.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모든 판단과 권한을 가진 기장이 통제를 해야하는데 결국 묵인한 것이 이런 결과가 됐다. 전적으로 기장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를 밝힐 핵심 단서인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사람을 수송하는 항공기는 필수이지만 우리 업체는 필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후한 헬기가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민간업계에서는 여전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종이다"라고 밝혔다.

■ **유족 측 "기계적 결함" 가능성 제기**

업체 측의 입장과 달리 유족 측은 사고 이전에도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맞섰다. 숨진 기장 A(71)씨의 조카 B씨는 이날 "지난달 12일 A씨와 식사를 했을 때 '이륙할 때 계이지가 빙글빙글 돌아 비상착륙을 했었다.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군에서도 항공병과로 소령까지 근무했고 올해 산불이 크게 났었을 때 현장에도 출동한 베테랑 조종사"라며 "평소 딸처럼 예뻐해주셨던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흐느꼈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헬기 추락 사고 발생 이틀째인 28일 오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이번 사고 헬기가 추락하는 모습이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당시 헬기는 비행 중 멈춰서다 시피 하다 제자리에서 2~3바퀴를 빙글빙글 돌다 그대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B씨가 A씨를 통해 '기체가 빙글빙글 돌았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셈으로 기장의 과실이 아닌 기계적 결함일 가능성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항공조사위는 헬기 중심부 위에서 돌아가는 메인 로터(주 회전날개)와 후미 부분의 테일 로터(고리 회전날개) 등 기체 파편과 잔해를 수거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 **미신고 탑승 여성 2명 신원 확인**

경찰이 미신고 탑승자인 신원 미상의 사망자 2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숨진 정비사 C(54)씨의 승용차량에 남은 지문을 채취해 확인한 결과 모두 C씨의 지인들인 경기지역 거주 50대 여성들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DNA(유전자 정보) 긴급 감정 의뢰 결과를 통해 최종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이 조사위 최종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고용노동부 강릉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적용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당초 탑승자는 기장 A씨 등 2명으로 기록됐으나 현장에서 3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박주석·구본호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종합 02면

1년에 한 번꼴 사고… 기령 47년 이상 4대

양양 산불계도 헬기 추락

2016년부터 총 7건 발생… 양양 사망자 5명 피해 역대 최고
사고 헬기 57% 30년 초과 노후 기종… 안전 확보 대책 시급

◇도내 지자체별 임차 헬기 현황

지역명	기종 및 기령
영월·평창·정선·태백	BO105S(36년), S-61N(48년)
삼척·강릉·동해	S-58JT(49년), S-58HT(48년)
속초·고성·양양	S-58T(47년)
홍천·춘천·인제	AS350B2(27년), KA-32T(31년)
원주·횡성	BO-105S(28년)
화천·철원·양구	MI-1(35년)

전국에서 지자체 임차 헬기 추락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전무하다.

산림청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 임차 헬기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건이 발생, 1년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났다. 특히 올해에는 5월 경남 거제(2명 사망)에 이어 11월 양양에서 임차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7일 발생한 양양 사고의 경우, 사망자가 5명으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5면

사고가 난 임차 헬기 7대 중 4대(57%)는 기령이 30년을 초과한 노후 기종이었다.

이처럼 노후 기종에 대한 안전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다.

올해 도내 18개 시·군이 권역별로 계약한 임차 헬기 9대 중 7대는 기령이 30년을 초과했다. 특히 기령이 47~49년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임차 헬기도 4대 있었다. 영월·평창·정선·태백 권역의 S-61N(기령 48년), 삼척·강릉·동해 권역의 S-58JT(49년), S-58HT(48년), 이번에 사고가 난 속초·고성·양양의 S-58T(47년) 등이다.

각 지자체들은 1대당 7억~10억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조성해 계약하지만, 계약 시 '노후도' 등 안전은 검토 기준에서 빠졌다. 국내에는 헬기 기령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고 관련 검사를 통과하면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 10개 시·도가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 중인 헬기는 총 72대로 기령이 40년 이상인 헬기는 40%에 달했다. 산불 예방·진화 목적의 지자체 임차 헬기 확보 수요는 점점 늘고 있지만, 열악한 공급 여건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불 임차 헬기의 소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안 되고 있다. 현재 정부, 지자체별로 '산불 헬기'는 산림청이나 산림분야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헬기의 안전 관리 감독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이 때문에 산불 임차 헬기 담당 부서도 안전 문제는 사실상 문외한인 셈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산불 방지 수요는 높아져 헬기는 필요한데, 안전 관리 분야는 지적 사항이 많아 딜레마"라며 "정부 차원에서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사회 05면

2~3초 만에 수직 추락 … 기체결함 가능성 등 조사

양양 임차 헬기 사고

블랙박스 설치 안 돼 난항
수사결과 상당한 시일 전망
회사측 "블랙박스 규정 없어"

숨진 여성 2명 승무원 지인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사회 05면

헬기 추락 현장 조사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헬기 추락 사고 발생 이틀째인 28일 오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27일 양양에서 추락한 임차 헬기에 미신고 인원이 탑승(본보 28일자 1·5면 보도)한 경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기체 결함 가능성 등 임차 헬기 추락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 **"기장이 비공식적으로 탑승 묵인"**=사망자 5명 가운데 기장과 정비사 2명 외에 탑승했던 여성 2명에 대한 신원도 알려졌다. 사고 헬기의 계약 업체인 '트랜스헬리'사의 이종섭 대표는 28일 양양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 미상의) 2명은 승무원 1명의 지인"이라며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신고를 누락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신고 인원 탑승에 대해 "모든 판단과 권한을 가진 기장이 통제를 해야 하는데 묵인했던 것이 이런 결과가 돼 버렸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경찰 잠정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신원 미상 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들이라고 파악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항공안전법상에는 비행계획서를 탑승 인원을 정확히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 **국토부 사고 조사 돌입… 시일 걸릴 듯**=정부 차원의 사고 경위 조사도 시작됐다. 사조위는 28일 오전부터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고 헬기는 기령이 47년 된 노후 기종이어서 기체 결함 가능성도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산불 방송 직후 2~3초 만에 수직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 단서인 비행기록 장치인 FDR(블랙박스)가 해당 헬기에는 설치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트랜스헬리'사 측은 "사고 헬기는 여객용이 아닌 화물 운송 목적이어서 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민간 헬기 안전 관리 분야에서 허점이 또 드러난 셈이다.

사조위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년 전 울산, 청주에서 발생한 민간 임차 헬기 추락 사고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탑승 경위, 상호 관계는 사고조사위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음주, 약물 복용 확인이 필요한 만큼 부검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신하림·이규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9일 (화)
종합 01면

“테슬라 공장 강원도에 유치하겠다”
김진태 지사 기가팩토리 유치 선언

최근 머스크 “한국 최우선 후보”발언
도, 지난 7월 테슬라 사전교감 강점
경기 고양시 등 지자체 유치전 과열

강원도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테슬라의 공장을 강원도에 유치하겠다”며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국내 유치전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화상면담에서 테슬라의 아시아지역 기가팩토리 추가 건설과 계획과 관련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윤 대통령은 당시 면담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고 일론 머스크 CEO는 “한국은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청정에너지 등을 내세워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도는 테슬라 측과의 사전교감도 강점으로 꼽았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만나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와 테슬라코리아 측은 도내 11개 시·군 34개소에 테슬라 전용 충전시설과 범용 충전시설을 갖춘 충전스테이션 구축을 합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전스테이션은 내년 말까지 준공된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는 정부를 중심으로 강원도 등 각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심으로 기가팩토리 유치 전담팀을 구성, 유치전에 나선다.

정부 유치전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 간 유치전도 과열 조짐이다. 경기 고양시는 윤 대통령과 테슬라 측과의 면담이 틀 날인 지난 24일 유치전을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를 걷어낼 수 있고, 친환경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도 타 지자체 보다 훨씬 앞서나갈 수 있다”며 “이미 몇달 전부터 테슬라와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기에 (유치에) 한발 앞서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승환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종합 01면

테슬라 전기차공장 강원 유치 나선다

〈기가팩토리〉

김진태 지사 기자간담회 … 건설에 8조원·일자리 1만2천개 창출
도 테슬라와 협업 프로젝트 강점 … 전담팀 구성 정부 협의 추진

강원도가 테슬라의 전기차 제조공장인 '기가팩토리(Giga factory)' 유치를 선언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테슬라 공장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나서겠다"며 "테슬라 코리아에 강원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테슬라 공장 유치에 나선 것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화상면담에서 윤 대통령의 투자 요청에 대해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김진태 강원도정이 출범 초부터 테슬라 코리아와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원도가 테슬라 제조공장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올 7월 김경호 테슬라 코리아 대표는 김진태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강원도 친환경 모빌리티 성지화'를 제시하며 직접 투자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국내에서는 경기 고양시가 기가팩토리 유치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강원도가 테슬라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기가팩토리 유치에 성공할 경우 강원도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기가팩토리 건설에 8조원이 투입됐으며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연간 150만톤의 탄소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전담팀'을 구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건비 등 비용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가 우위에 있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테슬라의 경영방침이 우리나라의 고용시장과 부합하지 않아 국내 유치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최기영기자

☑ **기가팩토리** 테슬라 전기차의 모터, 배터리 팩, 에너지 저장 제품을 생산하고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시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9일 (화)
스포츠 24면

조별리그 마지막까지 부상 이탈 속출하는 '겨울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
벤투호 완전체 없이 훈련

대표팀 전체 훈련 매우 드물어
32개국 출전국 모두 부상과 씨름
3차전 상대 포르투갈 비상사태

2020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황희찬과 김민재가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별도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카타르 월드컵 조별예선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체 훈련이 쉽지 않다. 월드컵 사상 첫 겨울 시즌에 열리는 대회다보니 선수들의 부상 이탈을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비진의 유일한 '유럽파'인 핵심 김민재(나폴리)는 25~26일 팀 훈련에 불참한데 이어 27일에는 팀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으나 동료들과 같은 훈련을 소화하지는 않은 채 사이클을 타는 정도의 회복 운동만 진행했다. 대표팀은 월드컵 최종엔트리에 선발된 26인이 모두 참여한 적이 거의 없다. 예비엔트리 오현규(수원 삼성)가 꾸준히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전 멤버 전원이 함께한 적은 매우 드물다.

훈련에는 공교롭게도 대표팀 공수의 핵심 멤버들이 번갈아 빠졌다. 지난 24일 우루과이와 대회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준비할 때는 '황소' 황희찬(울버햄프턴·춘천 출신)이 없었다. 이달 초부터 햄스트링이 좋지 않았던 그는 도하 입성 이후 줄곧 개인훈련만 소화했다. 사이클을 타고 가볍게 몸만 푼 뒤 피치를 밟지 않은 채 훈련장을 떠나곤 했다. 하지만 대회 첫 경기 24시간 전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하는 최종엔트리 확정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1차전을 건너뛴 황희찬의 치료와 회복과정 모두 예정된 프로그램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황희찬은 지난 25일 공개된 훈련에서 약 70m 거리를 평균 15초 안팎으로 여러 차례 내달리며 몸 상태를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패스와 슈팅 등 공을 다루는 훈련까지 소화하며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다.

대한축구협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황소 달립니다'라며 그의 복귀를 거론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지난 27일 카타르 도하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황희찬은 가나전을 못 뛴다"고 밝혀 큰 아쉬움을 남겼다.

황희찬이 팀 훈련에 복귀하자 김민재(나폴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루과이전 후반 상대 공격수 다윈 누녜스(리버풀)의 역습을 막으려다 미끄러져 오른쪽 종아리에 충격을 받은 김민재는 회복에 전념했다.

부상과 씨름 중인 팀은 한국만이 아니다. 32개국 출전국 모두가 부상과 씨름 중이다. 최근 3차전 상대 포르투갈이 그렇다. 팀의 핵심 수비수 다닐루 페레이라(파리 생제르망)는 지난 27일 대표팀 훈련 중 오른쪽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포르투갈 언론은 페레이라가 아예 월드컵에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다. 페레이라는 가나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뱅 디아스(맨체스터 시티)와 합을 맞춰 풀타임을 뛰었다. 188㎝의 키에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정도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해 한국으로선 경계 대상이었다. 한국전엔 노장 페페(FC 포르투)가 투입될 예정이다. 40세에 가까운 나이 탓에 전성기 기량이 아니라는 점이 한국에겐 희망적이다. 사상 첫 겨울, 최초의 중동월드컵은 부상으로 어느 팀 하나 '완전체' 전력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대회로 남을 전망이다.

심예섭 yess@kado.net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사설/칼럼 19면

화물연대 파업, 조속히 정상화 해법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도내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강원지역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600여명 중 67%인 400여명이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강릉 라파즈한라시멘트, 동해 쌍용C&E, 대한송유관공사, 영월 한일시멘트 등 도내 주요 산업단지 거점을 막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이 장기화되며 항만과 시멘트, 정유업계 등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파업 후 도내 시멘트 업체의 일일 시멘트 수송량은 평소보다 2만5,000여톤이 감소한 5만톤에 그쳤다. 시멘트와 콘크리트 운송이 연쇄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 현장 셧다운이 코앞이다. 주유소도 재고가 바닥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복합위기라고 일컬어지는 경제난 속에서 이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파업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대체 수단과 인력을 통한 비상운송체계를 가동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물류 차질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성장률 하락, 계속되는 무역 적자 및 수출 감소, 투자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걱정이 큰 상황인데 물류 대란까지 겹쳐 경제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화물연대 파업의 손실은 수출입 항만에서부터 건설 공사 현장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다.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전한 코로나19 국면에다 각 분야 노조의 동투까지 겹쳐 도민 시름은 깊어간다.

정부는 올 6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지난 5개월간 정부가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와의 대화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닌가. 정부가 한쪽으로는 협상을 하겠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파업을 풀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 역시 협상에 임하는 자세로 적절치 않다. 화물연대도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을 향한 운송 방해나 저지 같은 행동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고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도 화물연대도 강 대 강으로 부딪쳐서는 취할 이득이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인질로 삼았다"는 지적과 "원칙도 비전도 없는 노동정책"이라는 비난만 살 뿐이다. 더는 파업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江原日報
2022년 11월 29일 (화)
사설/칼럼 19면

인구소멸 현실화, 강원도 '지속 전략' 다시 짜야

강원도 내 분기당 출생아 수가 2,000명을 밑돌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0 이하로 떨어졌다.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강원도 인구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간 말로만 우려하던 '쪼그라드는 강원도'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2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도내 출생아 수는 1,874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분기부터 6분기째 2,000명을 넘지 못했다.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3분기 도내 0.98로 전국 평균(0.79)보다는 양호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 2분기(0.94)에 이어 2분기 연속 1.0을 밑돌았다. 폐광지의 경우 태백시는 1980년대 인구가 12만명을 넘었지만 올 들어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4만명까지 붕괴된 상태다.

합계출산율 사상 첫 2분기 연속 1.0 이하
폐광·접경지역 인구 감소는 갈수록 심각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때

여기에 장성광업소가 2024년 폐광을 앞두고 있어 인구 유출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성광업소에 이어 2025년 말 삼척 도계광업소 등 단계별 조기 폐광이 예정돼 있지만 폐광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땅한 대안이 없어 지역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을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둘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접경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수치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인구는 2016년 16만1,121명에서 2020년 15만285명으로 1만836명이나 줄어들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2033년 기준 화천의 인구는 현재보다 59.9%, 양구는 52.3%, 고성은 52.1%로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군(軍)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원도는 지속가능한 전략을 다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도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본격적인 총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그간 인구 증가를 목표로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던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노동력과 납세 기반을 전제로 한 교육, 산업, 재정, 인프라 계획은 급변하는 인구 앞에 사상누각일 수 있다. 현실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다시 마련할 시점이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매력 창출로 정책을 이동해야 한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을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빈집이나 유휴공공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미래 주역인 디지털 근로자를 끌어들이고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9일 (화)
사설/칼럼 21면

소양강댐 주변 지역 정당한 지원을

-규제 피해 감수 국가발전 기여, 이익 환원해야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댐으로 인한 개발 규제에 따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댐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역할에 비하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댐 건설과 운영으로 주민들이 받았던 불이익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재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규모 확대 요구는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연대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과도한 규제와 수몰 피해로 지역 발전이 지체돼, 인구 소멸 위기에 이르렀다고 실상을 전했습니다. 양 지역은 해당 유역 자치단체장의 댐 운영·관리 참여와 출연금·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댐 수익과 관련해 제시된 근거 자료는 지원 확대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국 27개 댐 전체 수익금 중 소양강댐·충주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4%, 1622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해당 지역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101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강원과 충북은 "두 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됐고 서울·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홍수조절 기능도 했지만, 온갖 규제로 지역민들은 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합치해 충북·강원 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지원 확대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수몰민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야 했고, 고향을 등지고 실향민이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습니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과 충북 지역구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자리를 함께하며 다목적댐 관리권 분배를 정부에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양강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의제가 제기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개인의 이익을 뒤로하고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은, 정당한 대가와 지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11월 29일 (화)
사설/칼럼 21면

시멘트 폐기물세 신설 빨라야 한다

-연료용 폐기물 급증세 오염물질 방출, 보건문제 대응 시급

강원도와 충북 시멘트공장 소재지에서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도내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2개 지역은 시멘트공장에서 연료로 쓰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세제를 2024년 1월 도입 목표로 공동추진행정협의회를 발족키로 합의한 것입니다. 근래 격년단위로 폐기물반입량이 100만t씩 급증 추세인데다가 환경부에서 반입량을 3배 더 늘릴 수 있도록하면서 각종 오염 물질 방출로 인한 주민 건강과 보건 위협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시멘트를 고온에서 소성하는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 금속과 금속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각종 오염물질 방출은 소재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오염 물질 방출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시멘트산업 자원순환폐기물 재활용 실적 현황에 따르면 폐기물 사용량이 2017년 700만t에서 2019년 800만t을 돌파했으며 21년에는 900만t으로 늘어나는 등 격년 단위로 100만t씩 급증 추세입니다. 더구나 환경부가 폐기물 사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60%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각화를 부추기는 등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쓰는 각종 폐기물에 세를 부과해 공장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쓰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폐기물 1kg에 1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2021년 기준 연간 905억원 세수 창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했다가 업계 등의 반대로 인해 관철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멘트세 도입이 제기된 것이 1990년대 중반이니 무려 30년 허송세월한 셈입니다.

이번에 6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출범되면 곧바로 입법을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했습니다. 시멘트 폐기물 반입세 입법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이전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상당한 환경적 비용을 초래하는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근래 급증하고 있는 연료용 폐기물 반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주민 보건 문제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대응책 및 예방책을 내놔야 합니다.